

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

검토보고서

2021. 6. 24.

행정재무위원회
전문위원 조남문

1. 제 안 자: 성동구청장

2. 제안이유

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법 개정(시행 2021. 3. 9.)으로 기초자치단체도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.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전국 시군구 차원의 남북교류 정책과제 발굴과 중앙 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 정책 협의를 담당할 창구로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협의회 명칭, 목적, 사업(안 제1~3조)
- 나. 협의회 위원 및 임원의 구성, 의무, 권리, 임기(안 제4~10조)
- 다. 총회, 운영위원회, 특별기구, 사무국 운영(안 제11~23조)
- 라. 협의회 재정 및 회계(안 제24~27조)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: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
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의2

- 나. 예산조치: 매년 본예산에 협의회 경비부담금 500만 원 반영
- 다. 규약전문: 별첨

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2021년 4월 설립한 ‘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 협의회’의 규약에 대해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.
-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 개정(2021. 3. 9. 시행)으로 기초자치 단체도 남북교류·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, 38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책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본 협의회는 27개 조항과 3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, 주요내용으로 협의회 목적과 사업, 위원 구성, 총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, 특별기구 및 위원회 운영, 사무국 조직, 재정 및 회계 관련 조항 등이 기술되었으며, 필요한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여 우리 구는 연 500만 원을 부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.
- 남북교류협력은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와 공존을 가져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,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한 만큼, 전국 시·군·구 차원의 남북교류 정책과제 발굴 및 통합 추진,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통해 민족 화해와 협력,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며, 의회 동의 이후에도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.

＜ 관련법규 ＞

붙임 1

「지방자치법」

제152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제153조(협의회의 조직)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.

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제154조(협의회의 규약)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협의회의 명칭
2.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
3.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
4.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
5.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
6.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155조(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)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, 의견 개진,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56조(협의사항의 조정)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(調整) 요청을 하면 시·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, 시·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·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관계되는 시·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·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

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.

제157조(협의회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)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.

제158조(협의회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)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.

붙임 2

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 (약칭: 남북교류협력법)

제24조의2(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·협력의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·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·협력을 증진하고, 관련 정책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둔다.

③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